

영유아 발달권 보호를 위한 사교육 대응 방안

최원석 교육부 영유아정책총괄과 영유아사교육대책팀장

1 들어가는 말

영유아기는 한 사람의 평생 발달을 지탱하는 기초가 형성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이 시기의 배움은 지식을 얼마나 빨리, 얼마나 많이 익히느냐로 평가될 수 없다. 안정적인 애착, 충분한 놀이와 신체 활동, 또래와의 상호작용, 풍부한 언어적·정서적 경험 속에서 아이들은 자신을 이해하고, 타인과 관계 맺는 법을 배우며, 세상을 탐색해 나간다.

그러나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영유아기 교육의 본질과 다소 거리가 있는 현상들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른바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유아 대상 입학시험, 영어 레벨테스트, 장시간 인지교습, 한국어 사용 제한, 성적표와 등급을 통한 비교·서열화 등이 대표적이다. 아직 충분히 놀고 쉬며 자라야 할 아이들이 학원 입학을 위해 시험을 보고, 점수와 등급으로 또래와 비교되는 상황은 더 이상 일부의 예외적 사례로만 보기 어렵다.

「아동 발달권 보호를 위한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부모들이 왜 이토록 이른 시기부터 사교육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느끼는지, 그 구조적 불안의 원인을 살펴보는 데서 출발한다. 영유아 사교육 문제의 상당 부분은 개별 부모의 과도한 욕심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남들이 다 하니 우리 아이만 뒤처질 수 없다.”는 사회적 압력, 공교육에 대한 불신, 입시 경쟁의 조기화,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부모의 선택 뒤에는 불안이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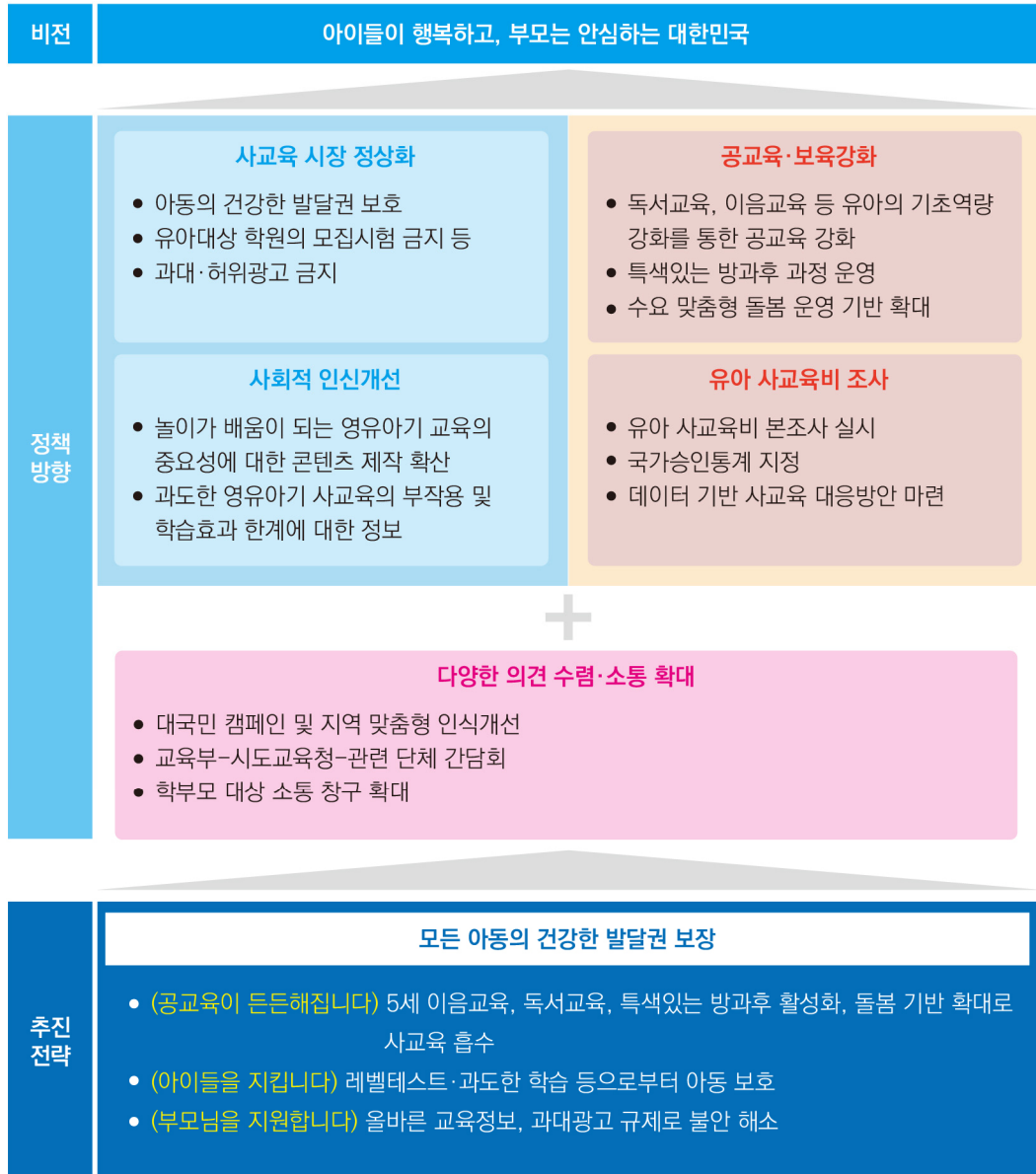
고, 그 불안을 과도하게 활용하는 일부 비정상적인 시장 행위가 존재한다. 실제로 영유아기 부모가 조기 사교육을 선택하는 주요 배경은 불안, 공교육 불신, 조기 투자 기대, 돌봄 공백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특히, 유아가 학원 입학을 위해 시험을 치르고, 또래와 점수로 비교되며, 발달단계에 맞지 않는 장시간 학습을 감내하는 현상은 단순한 교육 선택의 문제로만 볼 수 없다. 영유아는 자신의 어려움이나 고통을 충분히 언어화하기 어렵고, 스스로 학습 환경을 선택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힘도 제한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사회의 중요한 책무이다. 이는 부모의 교육권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동의 발달권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 기준을 세우는 일이다.

이번 방안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과도한 조기 사교육을 아동학대로 판단하고 비정상적인 선행교육 행태 개선을 권고한 결정의 취지와,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제시하는 아동 최선의 이익, 생존과 발달의 권리, 아동 의견 존중의 원칙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다. 영유아 사교육 문제는 교육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아동권리의 문제이며,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이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지난 4월 1일 교육부가 발표한 「영유아 사교육 대응 추진 방안」의 구체적인 방향과 주요 추진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영유아 사교육 대응 추진 방향

[그림 1] 비전 및 정책 방향



자료: 교육부 보도자료(2026. 4. 1.). 아동 발달권 보호를 위한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 발표.

가. 사교육 시장 정상화

아동의 건강한 발달권을 보호하기 위해 유아 대상

학원의 모집시험, 과도한 교습, 과대·허위 광고 등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부합하지 않거나 발달권 침해 우려가 큰 행위를 합리적으로 규율하고자 한다.

나. 공교육·보육 강화

유아 발달에 적합한 놀이 중심 교육을 통해 기초 역량을 길러 주는 누리과정을 내실화하고, 5세 이음 교육, 독서교육, 특색 있는 방과후 과정, 수요자 맞춤형 돌봄 기반을 확대하여 사교육에 대한 의존을 공적 체계 안에서 완화해 나가고자 한다.

다. 사회적 인식 개선

영유아기에는 놀이와 일상 경험이 곧 배움이 된다는 교육적 가치, 과도한 사교육의 한계와 부작용에 관한 과학적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함으로써 부모가 불안을 낮추고, 발달에 적합한 교육 선택을 지원하고자 한다.

라. 유아 사교육비 조사

본조사의 실시와 국가승인통계 지정을 통해 영유아 사교육 실태에 관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보다 정밀하게 설계·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추진 방향은 규제와 지원의 균형을 전제로 하며, 직업 선택의 자유와 부모의 자녀교육권에 대한 우려를 충분히 고려하면서도 영유아의 행복추구권과 건강권, 그리고 발달권 보호를 헌법적·사회적 가치를 정책의 중심에 두고 추진하고자 한다.

정책 추진의 핵심은 부모에게 “사교육을 하지 말

라”고 요구하는데 있지 않다. 오히려 부모가 사교육에 기대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만드는데 있다. 시험을 보지 않아도 아이가 존중받고, 선행학습을 하지 않아도 초등학교에 안정적으로 적응하며, 학원을 보내지 않아도 방과후와 돌봄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고, 과장 광고가 아니라 공신력 있는 정보에 근거해 판단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이번 대응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3 주요 추진과제

가. 영유아 발달권 보호를 위한 사교육 시장 정상화

첫 번째 과제는 영유아 사교육 시장의 정상화이다. 공교육과 사교육 전반에서 아동의 권익이 존중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육기본법」에 취학 전 아동의 발달과 정서 보호에 대한 국가 책무를 명시하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학원 설립·운영자에게도 아동 권리보호 책임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특히 학원법 개정 시 레벨테스트 금지, 유해교습행위 금지, 과대·허위광고 금지를 핵심내용으로 포함할 계획이다. 유아 대상 모집시험 금지 관련 학원법 개정은 2026년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레벨테스트 금지는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모집 시험·평가와 수준별 배정 목적 시험·평

〈표 1〉 주요 추진과제 요약표

추진 과제	세부 내용	기대 효과
사교육 시장 정상화	레벨테스트 금지, 유해교습행위 제한, 과대·허위광고 금지	발달권 침해 예방, 시장 질서 개선
공교육·보육 강화	누리과정 내실화, 5세 이음교육, 방과후·돌봄 확대	사교육 의존 완화, 공교육 신뢰 회복
보호자 지원·인식 개선	부모교육, 전문가 콘텐츠, 지역 맞춤형 사업	불안 완화, 합리적 선택 지원
데이터 기반 정책관리	유아 사교육비 조사, 통계 구축	근거 기반 정책 운영

자료: 교육부 보도자료(2026. 4. 1.). 아동 발달권 보호를 위한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 발표.

〈표 2〉 제도 개선 비교표

구분	주요 내용	정책 취지
레벨테스트 금지	모집·선발·반편성 목적 시험 제한	조기 선별 경쟁 완화
유해교습행위 제한	36개월 미만 주입식 교습 금지, 36개월 이상 장시간 인지교습 제한	발달 적합성 확보
과대·허위광고 금지	효과 과장, 불안 조장 광고 제한	합리적 정보 환경 조성
제재 강화	과징금·과태료 상향, 신고센터 강화	제도 실효성 확보

자료: 교육부 보도자료(2026. 4. 1.). 아동 발달권 보호를 위한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 발표.

가를 금지하는 것이다. 지필평가뿐 아니라 구술평가 방식이라도 유아의 지식 습득 정도를 측정하고 정답과 오답을 판정하는 행위라면 금지 대상이 된다. 타 기관 학습 이력이나 공인 영어점수를 요구하는 방식처럼 우회적인 선발 행위도 제한할 예정이다. 이는 유아의 과도한 학습 부담과 선발 경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유해교습행위 금지는 영유아 발달단계에 맞지 않는 인지교습을 제한하는 데 초점이 있다. 36개월 미만 영아를 대상으로 교과목 중심의 지식 주입을 위해 강사가 주도하는 인지교습은 전면 금지하고, 36개월 이상 취학 전 유아에게는 장시간 인지교습을 금지한다. 구체적으로 1일 3시간, 1주 15시간을 초과하는 인지교습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유아의 학습결과를 점수·등급·순위로 표시하거나, 한국어 사용에 대해 벌점·불이익을 부과하는 등 비교·서열화와 발달 저해 행위도 규율할 예정이다.

과대·허위광고 금지도 중요한 과제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학습자 모집 단계의 광고 규제가 중심이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상담과 설명 과정에서 “초등 입학 전 반드시 끝내야 한다”, “상위권 진학을 보장한다”는 식의 불안 조장 정보가 제공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학습자 모집뿐 아니라 수강·교습 관련 상담과 설명단계까지 제재 범위를 확대하여, 객관적 근거 없는 학습효과와 진학실적 강조를 금지할 계획이다. 이는 부모의 불안을 이용하는 시장 행위를 줄이고, 합리적 선택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조치이다.

규제의 실효성 확보도 병행된다. 위반행위로 얻

는 이익보다 제재 비용이 낮다면 규제는 선언에 그칠 수밖에 없다. 이에 과징금을 매출액의 50% 이내로 도입하고, 과태료를 최대 1,000만 원까지 상향하는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행정처분, 형사벌, 과징금을 병과할 수 있는 체제도 마련한다. 아울러 학원 등록 시 모집시험 실시 여부 등 운영 정보를 기재하도록 하고, 불법사교육신고센터 기능을 강화하며, 신고포상금 상한을 200만 원으로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동시에 현장의 자율개선을 유도한다. 유아교육 비전공 강사를 대상으로 아동 발달 이해를 돕는 온·오프라인 연수와 교습 길라잡이를 제공하고, 발달단계별 지도 사례와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보급한다. 이는 규제 중심 접근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시장이 아동 발달권 보호라는 사회적 책무를 인식하고, 학원 운영자가 스스로 적절한 교습방식을 점검하도록 하는 기반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나. 공교육·보육 강화를 통한 신뢰 회복

두 번째 과제는 공교육과 보육의 신뢰 회복이다. 부모가 조기 사교육을 선택하는 이유 중 하나는 공교육만으로 충분한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불안이다. 따라서 사교육 수요를 줄이기 위해서는 규제와 함께 공적 교육·보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

우선 누리과정 운영을 내실화한다. 유아가 주도하는 놀이 흐름 속에서 신체활동, 바깥놀이, 또래 상호작용, 언어 경험을 충분히 누리고, 그 과정에서 자

연스럽게 배움을 경험하도록 지원한다. 0-2세 표준 보육과정, 3-5세 누리과정, 초등 교육과정 간 연계를 강화하고, 특히 5세 유아의 초등학교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유치원·어린이집 대상 이음교육을 확대한다.

독서교육도 강화한다. 문해력은 단순히 글자를 빨리 읽고 쓰는 기술이 아니라, 이야기를 듣고 상상하며,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고, 타인의 관점을 이해하는 전인 발달의 기초이다. 따라서 누리과정 속에서 유아기 발달에 적합한 지속적이고 다양한 언어 경험을 제공하고, 성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책 읽기, 책 놀이, 도서관 연계 프로그램, 찾아가는 북트럭 등을 운영한다.

방과후 과정은 학부모 수요와 유아 발달을 함께 고려하여 개선한다. 학부모 수요가 높은 예술, 체육, 언어 분야 프로그램을 교육과정과 연계해 개발·보급하고, 어린이집까지 포함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기관별 특색 프로그램도 활성화한다. 방과후 특색프로그램 활성화 사업은 2026년 1,000개원에서 2027년 1,500개원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방과후 담당 인력 9,000명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온라인 연수도 추진한다.

돌봄 기반 확대도 사교육 경감의 중요한 축이다. 맞벌이 가정은 교육 목적뿐 아니라 하원 이후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학원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품질 제고를 통해 보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2027년까지 공공보육 이용률 50% 이상 달성을 목표로 한다. 또한 아침·저녁·방학 등 틈새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거점형·연계형 돌봄기관을 2026년 200개원, 2027년 이후 300개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도 확대한다.

공교육·보육 강화의 의미는 사교육을 공교육이 그대로 대체한다는 데 있지 않다. 발달에 적합한 교

육과 안정적인 돌봄을 공적 체계 안에서 충분히 제공함으로써 부모가 과도한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을 만드는 데 있다.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더 이른 시험 준비가 아니라, 더 안정적이고 풍부한 성장 경험이다.

다. 합리적 선택을 돕는 교육 정보 제공과 사회적 인식개선

세 번째 과제는 사회적 인식 개선이다. 영유아 사교육 과열의 밑바탕에는 정보의 비대칭과 부모의 불안이 존재한다. 많은 부모들은 자녀에게 더 좋은 선택을 해주고 싶지만, 온라인 커뮤니티와 입시·성공담 중심의 정보 환경 속에서 무엇이 영유아 발달에 적합한 경험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이를 위해 전문학회¹⁾와 연구기관²⁾과의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영유아 발달과 교육에 관한 과학적 근거 기반 콘텐츠를 공동 개발·확산할 계획이다. 영유아기 뇌 발달과 놀이 경험의 중요성, 정서·사회성 발달, 과도한 조기 선행학습의 한계와 영향 등에 대한 내용을 전문가 감수를 거쳐 국민에게 쉽게 전달함으로써 부모가 불안과 경쟁 중심 정보가 아닌 발달 적합성과 아이의 삶의 질을 중심으로 교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특히, 보호자들의 실제 고민과 영유아 사교육 실태를 토대로 연령별·지역별 맞춤형 정보자료를 개발하고, ‘학부모는 처음이라’ 가이드북과 온라인 강의를 제공한다. 또한 교육·보육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영유아 성장·발달단계별 보호자 교육자료를 개발·보급한다. 2025년에는 유아 3-5세 보호자 교육자료인 ‘우리 아이를 위한 양육 길라잡이’ 디지털 콘텐츠 57편을 제작하였고, 2026년에는 영아 0-2세 부모 교육자료를 추가 개발할 예정이다.

전문가 기반 정보 제공도 강화한다. 영유아 교육,

1)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한국영유아아동정신건강학회, 한국인지과학회, 구성주의유아교육학회

2) 육아정책연구소

뇌 발달, 소아청소년 건강, 아동정신건강 등 관련 학회·전문가와 협력하여 조기 선행학습의 한계와 영유아 발달에 적합한 배움의 중요성을 알기 쉽게 전달하는 콘텐츠를 제작·확산할 계획이다. 또한 분야별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정책토론회와 포럼을 개최하고, 권역별 학부모 토크콘서트 등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보호자가 전문가의 설명을 직접 듣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 나갈 예정이다. 대국민 참여형 챌린지도 병행하여 영유아기 배움과 놀이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한다.

기존의 강연, 다큐멘터리 등 공신력 있는 자료는 숏폼 영상과 카드뉴스 등 확산성이 높은 형식으로 재가공하여 SNS, 포털,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제공한다. 이를 통해 국민이 일상 속에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는 부모에게 단순히 “사교육을 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무엇이 아이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접근이다.

지역 맞춤형 인식 개선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영유아 사교육은 지역별 사교육 시장 구조, 학부모 수요, 공공자원 접근성에 따라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 이에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이 지역 여건과 사교육 실태를 고려하여 맞춤형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예컨대 지역 내 공공기관, 도서관, 체험학습 자원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원 외에도 활용 가능한 지역사회 영유아 교육·보육 자원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보호자의 선택지를 넓힐 수 있다.

아울러 누리과정에서 강조하는 놀이 중심 교육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배움으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콘텐츠도 제작한다. 유아교육 현장의 교사 크리에이터와 협력하여 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생생하게 소개하고, 부모 인플루언서 등 현장 연계 협의회를 구성하여 학부모가 공감할 수 있는 언어와 방식으로 메시지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라. 유아 사교육비 조사를 통한 데이터 기반 정책 추진

네 번째 과제는 데이터 기반 정책이다. 그동안 영유아 사교육은 초·중·고 사교육에 비해 실태 파악이 상대적으로 어려웠다. 유아 대상 사교육의 범위가 예체능, 언어, 놀이, 독서, 반일제 학원 등으로 다양하고, 기관 재원 유아와 가정양육 유아의 이용 양상도 다르기 때문이다. 정책이 지속 가능하려면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가 필요하다.

2026년부터 부모 인식 조사를 포함한 유아 사교육비 본조사를 실시하고, 국가승인통계 지정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국가 데이터의 신뢰성, 안정성, 지속성을 확보하고, 영유아 사교육 실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할 계획이다. 조사결과는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와 연계하여 심층분석하고, 영유아 사교육 경감을 위한 중장기 방안 연구와 종단분석에도 활용된다. 2026년 조사는 기획, 조사 준비, 본조사, 집계·분석을 거쳐 익년 3월 공표하는 일정으로 추진된다.

데이터 기반 정책은 단순히 통계를 생산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어느 시기와 연령에서 사교육 참여가 급증하는지, 어떤 과목과 유형이 부모 불안을 크게 자극하는지, 돌봄 공백과 사교육 이용이 어떤 관계를 갖는지, 지역별 차이는 무엇인지 분석해야 한다. 그래야 규제, 공교육 강화, 돌봄 확충, 인식 개선 정책을 정밀하게 조합할 수 있다. 향후 유아 사교육비 조사는 영유아 사교육 대응 정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정책을 보완하는 핵심 기반이 될 것이다.

4 맺는말

영유아 사교육 문제는 우리 사회가 아이의 시간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영유아기의 시간은 초등학교를 미리 준비하기 위한 예비 시간이 아니다. 아이가 마음껏 움직이고, 놀고, 질문하고, 관계 맺고, 실패와 발견을 반복하며 자기 삶의 기초를 만들어가는 시간이다. 이 시기에 필요한 것은 경

쟁의 조기화가 아니라 발달의 보호이며, 선행의 속도도 아니라 성장의 균형이다.

이번 대책의 의미는 영유아 사교육을 단순히 사적 선택이나 시장의 문제로만 보지 않고, 아이의 발달권 보호와 부모 불안 완화, 공교육·보육 신뢰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했다는 데 있다.

물론 한 번의 대책으로 영유아 사교육 과열이 곧바로 해소되기는 어렵다. 조기 사교육은 입시 경쟁, 노동시장 불안, 양육 부담, 지역 격차, 정보 불신이 오랫동안 누적된 결과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이번 대책은 시작점이다. 정부는 제도 개선과 현장 점검을 지속하고, 시·도교육청, 유치원·어린이집, 학계, 시민사회, 학부모와 함께 정책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영유아 사교육 대응의 최종 목표는 부모의 선택을 좁히는 것이 아니라, 아이에게 더 좋은 선택지를 넓히는 것이다. 아이가 시험 없이도 존중받고, 부모가 불안 없이 기다릴 수 있으며, 사회가 아이의 발달 속도를 함께 지켜주는 환경을 만드는 일이다. 앞으로도 영유아의 발달권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아이들이 행복하고 부모가 안심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책임 있게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